



일본 금융청, 지진피해 지방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 결정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금융청은 9월 14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의 센다이은행과 이바라키현의 츠크바은행의 공적자금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기능강화법에 의거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함.
- 금번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2011년 6월 지진피해 복구 금융지원책이 포함되어 개정된 금융기능강화법 시행 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되며, 금융청이 이들 은행에게 지원할 공적자금액은 센다이은행 300억 엔과 츠크바은행 350억 엔을 합하여 총 650억 엔임.
- 일본 금융청은 이들 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3월 말 기준 7.0%와 8.14%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9월 말 기준으로 각각 14.1%와 11.9%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.
- 최근 일본에서는 대지진 이후 피해지역의 지방은행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거나 거래 고객들의 지진피해로 인한 대출금 회수 곤란으로 불량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.
- 센다이은행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장이나 주택에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 대출액이 1,219억 엔으로 전체 대출액에서 24.3%를 차지하며, 츠크바은행도 지반 액상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대출잔액이 1,656억 엔으로 11.2%를 차지함.
- 일본 금융청은 공적자금 투입 배경으로 지진피해 지역의 지역산업 재건을 위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개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함.
- 일본 금융청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들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를 일부 인수할 예정인 가운데,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대출여력이 높아질 경우 지진피해복구에 대한 이들의 자금지원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함.
- 일본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은행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금융기능강화법으로 인해 향후 77은행, 산리쿠신용금고 등 지진피해지역 지방은행의 공적자금 신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.
(마이니치신문, 산케이신문, 시사통신 9/15 종합)